

우 엄격한 요건에서만 강제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이러한 주민등록증 제시의무도 헌법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운전면허증의 경우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한하여 면허증의 제시의무가 있을 뿐이다(도로교통법 제77조). 따라서 지금의 헌법과 법률체계에서는 각 증명서를 통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이 분명하다. 만약 다른 제도적 목적에 의하여 증명의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사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의 통합이 갖는 법률 체계상의 문제점과 전자주민카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

- . 비밀번호의 유용성 - 비밀번호를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 . OFF-LINE의 단독열람기가 일반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가
- . 안기부의 역할
- . 전자주민카드의 노동통제장치로 전용문제 - 출입카드로 사용, 출입통제시스템과 인력 · 노무

관리시스템의 결합

- . 최고의 보안장치를 마련할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 . 분실하였을 때의 대책
- . 전자주민카드의 재발급을 2-3일만에 할 수 있는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98 7/27	B4-1	53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1997. 4. 26. 도민토론회 / 김기중 변호사

1. 전자주민카드를 본질적으로 규제와 관리를 위한 제도이지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인적자원을 전산망으로 통합관리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요인이고 국민편익은 부수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국민편익을 두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등초본 등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ONE-STOP' 민원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등초본 등의 증명서는 현재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두는 한 여전히 발급받아야 할 것이고, 'ONE-STOP' 민원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 행정효율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줄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 이마에 딱지를 붙이고 살아 가도록 강요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법률적 근거없이 시행해도 되는가

2.1.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필요한 법령개정 대상은 중의 서식이나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고, 법령을 먼저 개정할 경우 제도와 전산화 결과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 전자주민카드는 증명이 통합될 뿐만 아니라 정보도 통합된다. 각 증명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고유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뿐이다. 국민을 규제하기 위하여 창안된 주민등록증이나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운전면허증과 복지행정을 위하여 발급되는 의료보험증이나 국민연금증서는 통합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명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단순히 중의 서식만을 바꾸는 법의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그러한 증명의 통합이 선택적이 아니라 강제적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일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강제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증 제시 의무규정과 제한규정은 무의미하다.

2.3. 한편,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특성상 전산화된 개인정보는 특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일반적 원칙이다. 헝가리에서조차 일반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직된 개인표지(a general and uniform personal identification mark(personal number))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을 정도이다(헝가리 헌법재판소 결정 NO-15-AB of 13 April). 독일에서도 인구조사를 통하여 얻은 개인정보를 지역계획 등의 행정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인구조사법의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정하기도 하였다.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OECD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데이터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외에는 수집목적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표준화하여 통일하고 이러한 정보의 상호유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개별법에 정하여진 증명서의 서식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2.4. 제도와 현실이 다르게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렇다면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법률의 제, 개정은 현실을 만들어 둔 후에 이루어지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먼저 행정적으로 제도의 규격을 정밀하게 디자인한 후에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정부의 주장은 먼저 모든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둔 후에 이 제도적 기반에 법률을 짜 맞추자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입법부를 모독하는 것이다. 예산회계법은 예산의 전용을 엄격하게 금하고 예산을 전용할 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앞에서 보았듯이 결코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이 아니다. 새롭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설정하는 초유의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상,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민등록증 갱신사업비에서 마음대로 꺼내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예산의 전용으로 불법적인 것이다.

3. 왜 실시하는가?

편리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편리하지 않고 경제적이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을 것인가. 편리하고 경제적이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3.1. 등초본 등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이 주장은 등초본 등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설치된 판독기와 출력기를 이용하여 주민카드로 등초본을 발급받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등초본을 발급받지 말고 주민카드로 대체하라는 것인가. 현장에서 주민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지금의 등초본 발급시스템과 현장에서 발급받는 것의 무엇이 다른가. 당사자가 동사무소에 가는 비용보다 현장에 설치할 판독기와 출력기의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할 수 있는가. 등초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모든 부서에 판독기와 출력기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필요로 하는 기관의 하나의 부서에 판독기와 출력기를 설치할텐데, 그렇다면 담당자가 소지자로부터 주민카드를 받아 판독기와 출력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주민카드를 판독기에 넣은 후 소지자를 불러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야 하는가. 한편 등초본 등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확인의 필요외에도 기록보존의 필요때문이기도 한데, 주민카드로 등초본의 발급 자체를 대체하는 범위가 그렇게 넓은가. 현재 등초본 등 증명서를 요구하는 공공기관과 사적기관이 어느 정도이고, 그 용도가 무엇인지 조사한 것이 있는가. 등초본 등의 증명서에 대한 수요가 사적기관이 70%이상이라는데, 그렇다면 주민카드로 인한 등초본 등 증명서의 수요감소는 미미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등초본 등 증명서의 발급은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고, 이를 줄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본 적이 보았는가.

3.2. 주민등록증 위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되나. 그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진정 주민등록증의 위조가 문제라면 신

분종의 재질을 종이에서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질의 것으로 바꾸고, 사진의 크기를 크게 하며 비표를 삽입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지,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자주민카드를 제작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정부도 주민등록증 갱신주기가 다가오자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는가.

3.3. 휴대가 편리하다? :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장의 다기능 카드가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단 한마디로 물리치고 있다.

“What would happen if you lost it?”.

예비군 훈련과 군입대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3.4.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활성화 : 의료보험증이나 국민연금증을 사람들이 휴대하지 않은 이유는 소지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보험증과 국민연금증을 개인이 휴대한다고 하여 무슨 사회복지행정의 고도화되고 국민복지가 향상되나?

3.5. 행정기관의 인력이 대폭 감소한다? : 신설되는 방대한 전산망은 누가 관리하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복잡한 보안장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3.6. 비용절감? : 한국전산원의 타당성 분석 자료는 비용이 절감되는 주요한 부분으로 ①경제적 파급효과, ②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비용, 교통비, 발급비, ③의료보험청구수수료 절감비용, ④약국보험 이용증진을 통한 편익증진, ⑤재발급수수료 절약, ⑥범죄피해의 감소, ⑦증명발급비용 절감, ⑧업무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등을 나열하고 있다. 우선 이 타당성 분석자료는 전체적으로 근거없는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거의 신빙성이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하여는 2,7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에 당연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따르는 것이지, 전자주민카드 사업 자체의 경제적 효용으로 분석할 일은 아니다. 두번째,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추정은 앞에서 보았듯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등초본의 우편제출이나 대리인에 의한 제출로 해결가능한 일이 앞으로는 항상 본인이 주민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현장에 가야 하는 불편이 추가될 것이다. 30원의 의료보험청구수수료는 단순히 전산입력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자주민카드로 전산입력이 자동화되므로 의료보험청구수수료가 없어질 것이라고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증이 세대별로 지급되어 있어 약국보험이용이 저조한데 주민카드로 통합되면 약국보험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은 의료보험증의 개별지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자주민카드의 발급근거가 되지 못하다. 셋째, 재발급수수료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주민카드의 재발급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증가하면 하겠지 결코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이 분명하다. 넷째, 위 타당성 분석 자료가 근거없는 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범죄가 10%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근거없는 가정을 전제로 하면서 또 별다른 근거없이 한 해의 범죄발생으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126 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액수의 10%를 전자주민카드의 경제적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런 분석은 사실 무의미하다. 넷째, 업무효율분석도 결코 논리적이지 못하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비용만을 계산하면서, 경제적 효용에 있어서는 의료보험조합이 얻을 이익을 함께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려면 전자주민카드사업을 하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도 계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사업이 주민등록증 관리사업보다 복잡하고 보안관리하는데 훨씬 어려움이 따르며 관련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 및 유지 보수비용을 매년 고작 50억원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주민등록업무 인원의 감축으로 인한 비용절감액을 매년 1,600억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4. 스마트 사용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우리의 경우에는 적어도 스마트 카드의 사용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아주 작은 범위에서 스마트 카드를 사용해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스마트 카드의 사용경험조차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사용하면서 추가비용이 필요하였는지, 관리비용은 전보다 더 적게 드는지, 단말기의 읽기에러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전산망 장애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등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거나 입수할 수 없다. 우리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일부 대규모로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사용의 현황, 사용목적, 사용방법, 시스템의 구성, 전산망 장애나 스마트 카드 자체의 장애문제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외부침해사례는 없는지 등등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민주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정부라면 위와 같은 다른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 문제점을 추출한 후 이를 공개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거친 후에 일정한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별다른 합리적 근거없이 추상적인 장미빛 희망만을 바탕으로 밀실에서 결정되고 밀실에서 추진되어 왔다. 정부가 주장하는 장미빛 청사진을 검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비밀번호가 보안장치가 될 수 있는가?

비밀번호는 보안체계의 출발점이며 분실카드의 불법적 사용을 막는 핵심적 요소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강제로 발급하는 성질의 신분증이라는 특성때문에 전자주민카드는 카드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발급할 수밖에 없다. 우선 200만명이상인 65세이상의 노인들과 수십만명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이 아니더라도 비밀번호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가지 뿐이다. 이들에게는 주민카드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없는 주민카드를 발급하거나 하는 방법뿐이다. 그렇다면 비밀번호없는 주민카드가 다량 생산, 유통될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에서 다른 주민카드의 비밀번호도 사실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한편, 비밀번호를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도 큰 문제이다. 신용카드와 같은 경우는 자신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전자주민카드는 카드를 제시하면, 카드에 수록된 정보를 필요한 사람이, 나아가 카드판독기와 출력기를 갖춘 사람이 카드를 받아 판독기에 넣은

후 본인을 불러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과연 가능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비밀번호를 불러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비밀번호는 거의 의미가 없고, 따라서 분실 주민카드의 이용을 막을 방법도 거의 없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신용카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컴퓨터 통신망 비밀번호, 홈뱅킹 비밀번호 등 술하게 많은 비밀번호를 함께 관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실수없이 비밀번호를 통한 접근을 성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나 자신도 이러한 비밀번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자신이 없다. 10자리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외우고 다닐 수 있나. 하지만, 신용카드, 컴퓨터 통신망 등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책임을 수행하는 것인데, 전자주민카드는 자신이 원해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번호를 엄격히 관리한다고 하여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나 편리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방어적 목적에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별다른 혜택을 부여하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엄격한 의무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6. 600억원의 예산으로 최신의 고난도 보안기술을 적용한 보안시스템을 만들수 있는가?
: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2,700억원정도인데, 이중 2,100억원은 카드발급비용으로 무조건 지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600억원으로 발급센터와 운영망 그리고 화상정보를 구축하고 업무개발비로도 사용하면서 「최신의 고난도 보안기술을 적용한 보안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최신의 고난도 보안기술 시스템」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 전산망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50억원 정도(한국전산원의 타당성 분석)를 예상하고 있다. 50억원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감을 잡기는 힘들다. 「최신의 보안기술을 적용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임에는 분명하다.

7. 안기부의 역할

안기부는 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자문 역할만을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안전기획부법 제5조는 암호자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제작해 필요한 기관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법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인가.

8. 과연 폐쇄망인가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에 사용할 전산망이 폐쇄망이므로 외부에서의 침해위험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읍면동 등의 기관에 설치된 15,000여대의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고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의료보험조합의 하루 단말기와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폐쇄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전산망은 조만간 초고속통신망과 연계될 예정이고, 자동차종합민원망(건교부, 보험회사, 차량검사소,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을 상호 연결)과도 연결되며, 의료보험망은 국민연금망, 보건복지부와 결합하여 복지관련 전산망으로 연결될 계속인 상태에서 '폐쇄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거짓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9.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하는 것은 자동차를 만들지 말자는 주장인가? : 전자주민카드를 자동차에 비교하는 것은 전자주민카드의 위상을 과장하는 것이다. 자동차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사회 정보화사업' 또는 '국가정보화사업' 전체이지, 전자주민카드가 아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굳이 자동차와 비교한다면 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증 위조로 인한 범죄 등의 문제때문에 추진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마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므로 모든 차량에 속도를 10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기계장치를 만들어 두자는 주장과 비슷하다. 사회가 정보화 체제로 변화해 가는 것은 누가 막을 수도 없는 큰 흐름이다. 다만 정보화 사회 자체는 커다란 흐름으로 막을 수 없을지라도 (아니 진흥하여야 하지만) 정보화 사회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한 부정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야지 무작정 한쪽방향이 옳다고 달려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소유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정보빈자와 정보부자의 괴리가 커질 것을 경계하고 있고, 모든 개인정보를 쉽게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비인간적인 정보관리사회가 도래할 것을 무척 크게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이같은 정보화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10. 제주도 발행의 자료집중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제주도가 발행한 설명자료집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서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는 국가신분증 자체가 없다. 주민정보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정보를 전산화하여 테트워드로 연결하자는 논의를 이제야 하고 있는데, 이정도 수준의 전산화 조차도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법률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복지카드'를 발행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드는 모두 복지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의료보험카드이다. 우리의 전자주민카드처럼 항상 소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발급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제시를 강제당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행정부처의 전산망을 상호연결하여 기본정보를 유통시키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거의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다.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는 그 조건이 아예 다르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198 5/12	B4-1	42

제 8 차 맥브라이드 라운드 테이블 특별 세션

8월 25일 일요일 오후 8시 서울대 호암 컨벤션 홀 한국방송학회

한국의 전자 주민 카드와 프라이버시

한국에서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것인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의 여러가지 정보를 하나의 칩 속에 담아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자주민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분단상황의 폐해는 크고도 깊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적인 신분증제도 (universal identification system), 즉 주민등록증 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만 채취하는 지문을 우리 국민들은 18세만 되면 무조건 10 손가락의 지문을 국가기관에 맡긴다. 전국민에 대한 신분증 발급과 지문채취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며 또 위협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냐에 대해 미처 심각하게 고려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더욱 더 위험한 전자주민 카드로 나가고 있다.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아이씨 칩 속에 담은 전자주민카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 국민에게 지문과 의료 등의 개인 신변정보가 들어 있는 전자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시도인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처럼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후진국들에는 그러한 카드를 시행할 기술이나 돈이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정보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에서는 그러한 카드를 시행하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국민의식과 제도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기본 인권과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은 듯하다. 프라이버시라는 말 자체가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가십거리의 대상인 연예인의 사생활이라든가, 뭐가 떴는지 못해 숨길 것이 있을 때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떴정한 자는 숨길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식의 논의와 기본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에는 거의 아무런 관련도 없다.

● 프라이버시권은 보통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며, "국가기관을 포함한 제 3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개개인이 열람과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을 도입하였던 고 썸 어빈 상원의원은, "정부가 개개의 국민에 대해 알 수 있는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정부에 양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나 다른 어떤 기관이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들이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더욱 커진다.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한 권리장전은 허튼 소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1980년대 말 전국민신분증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제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의 반대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미국에서도 1960년대 이래 여러차례 보편적 신분증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인권단체들의 광범한 저항 때문에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대신 사회보장 번호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반이민법안 중의 하나로 보편적 신분증제도가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 Roger Clarke, Information Technologies: Weapon of authoritarianism or tool of democracy?)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인 보편적 신분증(주민등록증)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마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곳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정도나 그

이상의 정보기술과 돈을 갖고 있는 선진국 중에서는 보편적 신분증제도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1990년에 EC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안(Privacy Directive)을 상정하였다. 정보주체인 개인의 분명한 동의 없이는 합부로 정보를 수집, 처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EC 가입국 12개국에 모두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가입이 거의 확실시 되는 선진국가들의 경제 협의체인 OECD도 1982년에 이미 정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된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정보 파일에는 절대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된다.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정보주체인 개인이 알고있어야 한다. 둘째, 정보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셋째,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확실하고도 의식적인 동의(예컨대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넷째, 정보주체는 자신이 공여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정보수집 이전에 그에 관한 적절한 법률적 규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 여섯째, 정보주체는 언제라도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흡하기 그지 없다. 위의 여섯가지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 의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예외규정 역시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공서, 정보기관 등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인 개인은 항상 접근, 열람, 수정 청구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장치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사적 영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상품화와 남용 등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다. (한편, 1993년에 뉴질랜드에서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법안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다. 뉴질랜드의 프라이버시법안은 가장 앞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것과 퀘벡 것 모두 OECD의 가이드라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 프라이버시위원회의 스투어트 박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사회에서는 기술적 장치와 법적 제도만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프라이버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자발적 시민운동만이 프라이버시 권을 지켜낼 수 있다. 물론 가장 첫발은 포괄적인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시행이다.

지금처럼 민주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주된 이유로 내세워서 추진 중인 전자주민카드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출현을 막아야 한다. 우선 정보화가 몰고 오고 있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인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또 사생활 보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 둔 후에야 전자주민카드 실행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카드 자체보다도 그러한 전자 카드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전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전국민 감시체제를 일컫는 데이터베일런스(database + surveillance)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호튼 미 하원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뿐이다. 여러가지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디렉터인 사이몬 데이비스 박사는 현재 한국의 전자주민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놓고 각국의 회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논의되는 사항으로는 PI 회원의 서명을 받아 한국의 전자주민증 반대 청원서 만들기, 한국의 대통령에게 PI 회원 명의로 편지보내기, 각국 언론에 한국의 전자주민증에 대한 기사 공급하기, PI 웹페이지(<http://www.privacy.org>)에 실기 등이라고 밝혀 왔다. 한편, PI 측에서는 한국 내의 각종 시민사회운동 단체와 변호사, 학자, 정치인들과 접촉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싶다면서 자

신의 연락처를 알려 왔다. 뜻 있는 단체나 개인의 많은 호응이 있기를 바란다.

Simon Davies, Computer Security Research Center,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Fax (44) 181-313-3726; 전자메일: davies@privint.demon.co.uk 한편,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은 1990년에 결성된 비정부비영리 국제기구로 주로 학자, 법률가, 정치인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활동 하고 있다. 주로 정보 기술의 남용에 의한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침해를 막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20여 개국 이상에서 프라이버시 이슈로 국제연계 운동을 펴 왔다. 한예로 태국과 필리핀에서 PI는 그 지역 내의 인권운동가 그룹과 함께 정부의 전국민 신분증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운동을 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의 전국민 신분증제도의 실시를 막는 데 성공하였다. 매년 프라이버시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하는데 올해에는 9월에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로 북미, 유럽,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신분증제도, 군사감시체계, 데이터매칭, 경찰정보체계, 신용카드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남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로는 본부는 영국 런던에, 집행부는 미국 워싱턴 디씨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가 있다. 매년 4차례 뉴스레터를 발간하며, 매년 한차례 컨퍼런스를 연다.

그 밖에도 프라이버시 관련 단체로서는: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는 정부 산하로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Roger Clarke (<http://www.anu.edu.au/people/Roger.Clarke/>)

CPSR (<http://www.cpsr.org/dox/home.html>) --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EFF: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정보사회의 각종 정보기술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단체 (<http://www2.eff.org/>)

EFF, ACLU, CDT, 등은 미국의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필라델피아 법원으로부터 만장일치의 지지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 현재 EFF는 인터넷 상의 통신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골든키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며, 미의회에서는 7월 25일 인터넷상의 암호체계를 개선시키는 이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다. 이 법안은 아메리칸 온라인, AT&T 등 영리단체는 물론 수 많은 비영리 사회-인권 단체로부터 광범위한 호응을 받고 있다. 주로 암호체계 기술의 수출 금지에 대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함; 국제적인 인터넷 통신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려면, 전세계적으로 암호체계 기술이 확장되어야만 한다.

The Progress & Freedom Foundation (www.pff.org) EFF, EPIC, CDT 등의 단체는 다시 인터넷 프라이버시 연합(Internet Privacy Coalition; IPC: www.privacy.org/ipc)이라는 단체를 최근에 결성하였다.

결국은 국민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리고 그러한 위험성을 막을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팩스>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요즈음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는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앞면에 소지자의 사진과 함께 손톱 만한 크기의 IC(집적회로)를 내장하고 있으며, IC에는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 의료보험, 인감, 지문, 국민연금 등 7개 분야 20여개 사항이 입력되어 있다. 시는 전자주민등록발급 대상자를 약 8백만명으로 잡고 카드 제조와 발급에 5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의 정보 (특히 의료와 개인 경제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누가 관리할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거대해지는 데이터베이스(병원, 공공기관 등)나 통신망(인터넷 등) 등에 관한 것들이지, IC 회로를 내장한, 전국민을 위한 전자주민카드(아마도 상상조차 할 수 없기에)는 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반박 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유례가 없는 일이라 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자랑스레 주장들 하고 있으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주범검거에 개판으로 흔한 지문을 보관하는 모든에게 받아 컴퓨터로 스캐닝해서 디지털 정보로 담아 둔다니! 아마도 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일단 지문을 채취해서, 슈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국민의 지문을 눈감찰할 사이에 대조라도 해볼 생각인가 봅니다. 이는 전국민의 모든 범죄에 대한 용의자화라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사생활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수많은 시민단체가 활동 중이고, 각 나라마다 여러 입법 초안을 비교하면서 학술대회까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 나라 시민단체들은, 아직 제가 찾아본 바로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가 관련 법규를 찾아 봤지만, 전자주민카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법률 제4969호인 "정보화촉진기본법". 다만, 정보통신부가 올해 발표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중에 "정보화 촉진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특히 그 중점과제를 선정한 기준이 엉뚱하게도 "2000년까지 실현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정보화 사업"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혀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도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o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PC통신 등을 통한 주민등록, 인허가증 등 각종 증명 발급 및 자동차민원종합처리 실시 등 One-Stop 서비스 개발 - 전자주민등록카드 제도 시행 : '96~'97년 시범사업 추진 및 보완, '98년부터 본격 발급 개시

이처럼 전자주민카드는 뚜렷한 법적 근거나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그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만 추진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만약 실행된다면, 전자주민카드는 정보화 기술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세계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체계는 하나의 악몽으로만 여겨집니다.

전자주민카드에 있는 정보는 자신의 것이라 해도 개인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정부가 제공하는 일정한 출력 시스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어떤 형태로든, 고의로든 실수로든, 개인의 정보를 열람, 수정, 복사, 저장, 판매, 등을 할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그리고 인간의 제도적 통제 장치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인 만큼 완벽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에 의해 고장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 크래킹 당해 정보가 누출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 불법으로 그러한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운전 위반과 사고 경력, 국민연금증에 실려 있을 각종 데이터 (직업, 직위와 그로 추정 가능한 재산 상태 등), 의료보험증에 실려 있을 병원 방문과 치료 경력, 사소한 병력과 개인의 세세한 건강 데이터가 들어 있을 병원의 데이터 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일련 번호 (예컨대 의료 보험증 번호),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인감증명에 관한 자료,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과 지문. --- 이러한 중요한 모든 개인 정보를, 저장, 복사, 열람, 전송이 순식간에 가능한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서 하나의 카드에 담아 놓는다면, 이것이 바로 전자 개 목걸이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전자주민카드는 항상 분실 파괴의 위험이 따를 것이므로, 분명히 전국민의 전자주민카드에 실린 모든 데이터는 시시각각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고 저장될 것입니다. 누구든 그 데이터베이스의 통제권을 갖는 사람이 곧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빅 브라더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빅브라더가 지금 막 대한민국에서 탄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보기관의 무지막지한 위력과 그에 의한 인권 침해의 악몽에서 깨어 나기도 전에 더 큰 악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1) 도대체 이러한 무시무시한 전자주민카드를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지? (2) 전자주민카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3) 지문과 같은 정보를 꼭 국가 정보기관에서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느 나라에서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3) 주민증과 같이 전시나 필요한 신분증제도가 과연 아직도 필요한가? (4)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주민등록이나 호적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번 기회에 아예 주민증과 등·초본, 호적제도를 모조리 없앨 수는 없는가?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도 많은데, 꼭 인감증명서라는 제도에 의존해야 하는가? 혼란이 우려된다? 밤 12시 통금을 없앨 때 누구나 혼란을 우려했지만, 곧 기우였음이 밝혀졌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통제에서 자율로의 전환은 일시적인 혼란을 감수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고발하고 국민을 일깨워서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일간 신문들에서는 전자주민카드가 가져올 편리함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사저널에서 이에 대한 기사를 확실히 다루어서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나름대로 계속 외국의 사례와 논의,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과 외국의 입법 사례를 등을 조사하여 시사저널이 훌륭한 기사를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사생활과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훌륭한 책과 논문을 발표한 갠디 교수와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저널에 일단 기사가 나간 뒤에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생활 보호, 인권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에 이 사실을 알려서 전세계적인 저항이 일어나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기술적 제도적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개인의 사생활 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입법 장치 없이는 절대 전자주민카드가 실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슈가 이슈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기사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인터뷰나 인용을 위해), 세계 각국의 사생활보호 인권단체들을 우선 접촉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기사를 만들어 가는 게 좋을지 알려 주시면,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자료		
198		
5/12	B4-1	39

서 대표 및 사랑방 동지들에게

고생들 많지요?

여기 보내는 자료는 지난 8월 초엔가 열렸던 맥브라이드 회의를 계기로 제기된, 한국 정부의 '전자주민증' 추진 문제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오늘 9월 21일자 각 신문도 이 사업의 최종 담당자로 테이콥이 선정되었다는 뉴스를 전하고 있군요.)

자료를 검토하면 명백한 것처럼 '전자주민증' 제도는 국가 권력과 자본에 의한 주민통제의 획기적인 강화로서 심각한 인권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여 대중적 저항을 통해서 이를 저지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조직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방 동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주도적으로 반대운동을 조직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반대운동과 접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뉴스제작단(노뉴단)의 김명준 씨에게 연락을 해보십시오. 전화번호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창신동에 옛 전노협 사무실에서 전노협 청산위와 나란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쉽게 연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제안을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9월 21일에

채 만 수

10A

이글은 맥브라이드 회의에서 김주환씨가 준비한 글입니다. 오늘 김주환씨로부터 받은 것인데 저도 잘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메일을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I would like to alarm you that another Big-Brother is coming with its most ambitious dream in South Korea: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which will be issued to every citizen as a mandatory within a year or so.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project is a part of South Korean government's ultra-speed communication network building project. Managed by the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the US \$413 million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Computer Institute. Once the project is completed in 1997, every Koreans of 17 years or older will be issued a single integrated circuit (IC) card with a photo which will include as many as 7 kinds (41 items) of personal digitized information: current universal ID card (currently every adult Korean has a photo ID issued by the Government), driver's license, medical insurance card, national pension card, proof of residence, and scanned fingerprints (!) among other things. (I don't know how many "democratic" governments are collecting fingerprints of their whole citizens.)

DACOM, a big telecommunication company in Korea, which won the bidding for the project, boasts: "As 8,000 characters worth of information can be stored on the single credit card-sized card, personal information needed for issuing official documents and certificates can be accessed promptly by public offices, institutions, companies, and banks or other organizations. The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has announced that the new cards will be distributed starting in January 1997. Full implementation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early 1998.

While there are some nations in which drivers' licenses are used in place of ID cards, this project will be the first system in the world which combines multiple functions onto one card. Once distribution is completed, the card will greatly boost efficiency, saving the government US\$1.3 billion and enabling it to eventually reduce its work force by 5,000 employees." (Quoted from: <http://bora.dacom.co.kr/bora/dacom/news-clips.html>)

As you can see, they have no concerns abou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cy. True, they are a company making money from that project, and probably we shouldn't expect any criticism against the Project.

The problem is, however, that almost all of the South Korean news media are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the "efficiency" and the "convenience" that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might bring about.

I tried to find critical arguments against the project via a comprehensive news data base in Korea, but I could not find any. I also checked many web sit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ocio-progressive groups in Korea, but none of them have raised the issue yet. They do not seem to realize the suspending dangers of their own privacy and human rights. Despite obvious and serious danger i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there is just no social discourse concerning the issue. I have also checked relevant laws (especially newly approved communication-related laws) through the database of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re seems to be no clear legal basis for the project. The project has been mentioned only in the "10 Plans for Efficient National Informatization,"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ut the City of Seoul already started to issue the Card as a "test" in March. The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said, as they

were issuing the "test" version of the Card to 1,000 citizens, "we will prepar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mplying that they are doing the project "before" (and probably "above") the law.

At the round table, I would like to raise this issue: Against the Electronic Card Project; Protect Privacy.

A few month ago, I noticed that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introduce a smart ID card which incorporates as many as 7 kinds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finger prints, into an IC card. This card will entail vast amount of databas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whole population, which facilitate the mass Dataveillance.

I raised the issue and sent out a note to privacy advocate scholars. (Below is what I sent out) I received encouraging note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they are trying to organize a movement against the Korean Electronic ID card. The Director of Privacy International, Dr. Simon Davies, suggested to write a petition to the President Kim Young Sam. Other efforts seem to be being made. Dr. Simon Davies expressed his hope to contact Korean civil right advocates, lawyers, politicians, and journalists.

(Refer to the attached file, which includes some of responses from many privacy advocate groups).

Please pass around this alarming note to everywhere.

Thank you very much, Kim Joohan

p.s. About the privacy issues, look at following web sites:

<http://www.epic.org/>

<http://www.anu.edu.au/people/Roger.Clarke/>

Currently, international privacy advocates are expressing deep concerns about the Electronic ID Card. Simon Davies, the Director of Privacy International, said:

By way of introduction, I am the director General of Privacy International, which brings together privacy advocates from across the world. We have mounted campaigns in several countries against such proposals, and have occasionally succeeded in stopping ID cards, though I must say that the task is not an easy one. The justification of efficiency and crime control is very powerful.

... SNIP ...

I would like to suggest a possible approach. First, we need a core group of people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an opposition to the scheme. We succeeded in stopping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ID cards, but we had to create a diverse group of lawyers, journalists, academics etc. These provided the foundation of opposition.

Are you able to suggest some poeple - say one lawyer one journalist and one political scientist - who could form the core group? They will have to be living in Korea.

Marc Rotenberg, our Secretary General, has suggested a some additional ideas on how we can help. These are :

- Item on PI homepage
- Petition signed by members of PI

- Letter to President of South Korea signed by members of PI
 - Efforts to get news articles in press Report
- What do you think of this ?

Reply to: RE On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Jooan,

Thanks you for your note. EPIC and Privacy International are discussing various steps that might be taken in response to the ID plan. One possibility is to send a public letter to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from many of the worlds leading privacy advocates and scholars, respectfully urging that the privacy implications of the ID plan be studied before the proposal goes forward.

What do you think of this idea? Could it be effective? Do you have a mailing address for the President? Are there other steps we might take?

Marc. Rotenberg.
EPIC

Dear Jooan:

Roger Clarke forwarded me your email.

In Quebec, we will soon go through a public debate on a similar project (cover story of Privacy Files May Issue): a multiservice card providing every citizens with an electronic signature device. The interesting thing for you is the very fact that there will be a public debate, in fact three: one before the Quebec national assembly, one following publication of a discussion paper on ID schemes by the Commission d'accès à l'information and one following pub of another paper by the Inforhighway Secretariat.

Do you read French? There is some material I could send to you.

Meanwhile, keep us informed. Quebec advocates are likely to publicize the Korean experiment as a negative example.

Best regards and our best wishes about this campaign.

* PRIVACY FILES bureau/office privacy.files@progesta.com*
* 1788 d'Argenson, Ste-Julie (Quebec) CANADA J3E 1E3*
* tel : +1 (514) 922 9151 fax: +1 (514) 922 9152*
* tel : (sans frais/toll free: Canada & US): (800) 922 9151*

Hello --

Roger Clarke sent me the enclosed message from you. May I forward it to a large global mailing list that I run?

Information on the list is available at <http://communication.ucsd.edu/pagre/rre.html> if you are interested. (I certainly understand if you do not want your message circulated, but I

thought I would ask.)

You might find my paper in The Information Society (volume 10 number 2, July 1994) to be helpful; it suggests some ways to think about computerized tracking of human activities. You should also find out about the Mytec system (a company in Toronto, Ontario) for biometric encryption. Everything legitimate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nts to do with this identity card can also be done anonymously through biometric encryption.

Thanks a lot

Phil Agre

You'll be interested to know that the author, Joohoan Kim, was put onto me a fortnight ago by his PhD supervisor, me mate Oz Gandy, in Philadelphia.

His message alarmed me, and I asked if I could send it to my personal list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30 privacy thinkers. One of those is me mate Phil Agre in Dan Diego, who runs rre. No, I don't know the person who posted it to cypherpunks, but isn't is a lovely little trace of how [bad] word spreads!

I also had a request-to-publish from the lady who runs Privacy Digest, after another of me mates on 'I've got a little list', Peter Neumann in Menlo Park, passed it onto her (sorry about the obscure allusion, but Peter's a Gilbert & Sullivan fan). So I expect it's appeared on privacy digest too, but I haven't checked.

And Graham Greenleaf will doubtless be publishing a brief excerpt in (Australasian) Privacy Law & Policy Reporter shortly.

Now all we have to do is fix the problem in South Korea; but at least "we" is rather bigger now ...

Roger Clarke <http://www.anu.edu.au/people/Roger.Clarke/> Xamax Consultancy Pty Ltd,
78 Sidaway St, Chapman ACT 2611 AUSTRALIA Tel: +61 6 288 6916 Fax: +61 6 288 1472

Visiting Fellow, Faculty of Email: Roger.Clarke@anu.edu.au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Sciences Building Room 211 Tel: +61 6 249 3666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CT 0200 AUSTRALIA Fax: +61 6 249 0010

Dear Kim, Joo Han,

Further to my letter yesterday, please find attached the note I intend to publish in 'Privacy Law & Policy Reporter'. Is my reference to you OK? Is there anything I should add?

By the way, do you happen to have a copy of the Korean privacy act governing public agencies, or any details of it - or even its name!! I would love to receive and publish any details that you have.

Are you interested in writing an article for the Reporter about privacy in Korea?

Regards, Graham Greenleaf

Bonjour.

Do you have a fax number. There is some material I could fax you at once (in English).
I also forwarded your message to a few privacy journalists friends that could be interested by what is happening in Korea. You might be contacted by at least one who is preparing a book on ID cards.

I am not a specialist on ID cards. Roger Clarke is a good one. Simon Davies is certainly a very good one: he has produced an international study for the Ontario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a good overview, not detailed, but good).

Best regards.

-- P.P.

P. PRIVACY FILES privacy@prograts.com

* 1788 d'Argenson, Ste-Julie (Quebec) CANADA J3E 1E3

* tel : +1 (514) 922 9151 fax: +1 (514) 922 9152

* tel : (sans frais/toll free: Canada & US): (800) 922 9151

Dear Joohan Kim,

Saw your note on Phil Agre's RRE.

There are a number of governments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twinned issues of ss and privacy in developed national information policy. The Nordic nations are specially good in this regard.

I recently wrote a paper that deals more with urban planning than privacy, but you will find some of the social issues relevant. At the end of the paper, there are a number of references to Web sites you will find helpful.

I'm sending you the paper in three email files, but if you prefer to read it on the Web, you can look at <<http://www.anu.edu.au/caul/cities.htm>>.

The home page linked to that page is that of the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and their pages have several other links you may find useful.

One of the key issues implicit in your letter requires consideration: the different cultural attitudes toward privacy that affect these kind of things in different cultures. Hofstede's work, for example, shows great differences in individualism versus group participation or high versus low power distance in business life. Anthropology shows great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public space or in acceptance of authority. I'd be surprised if this kind of difference was not also apparent in the way that different nations address the entire issue of priva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Best wishes for your study. Let me know if I can be of any further help.

Yours, Ken Friedman, Ph.D.

Associate Professor, Leadership and Strategic Design

Norwegian School of Management

Box 4676 Sofienberg N-0506 Oslo, Norway

joohan,

i'm sure you've read this question a few hundred times by now, but i also need to ask. did you create an email message regarding the creation of an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b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n which you request arguments against this card? may i distribute your message? (and, if you did create it, i'll be happy to voice very strong opinions against this proposed mechanization of the human identity).

thanks, patric

In response to your post about the S. Korean National Identification card, I thought I would direct your attention to various pro-privacy groups here in the U.S. These include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 based in Washington D.C.,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All of these groups have web sites loaded with information about privacy. Also, I will forward to you a privacy newsletter, co-sponsored by 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and other groups. It contains stories and histories related to privacy in electronic info.

BTW, I am a Korean American law professor who teaches Internet Law!
Maggie Chon

Joohoan,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project is a part of South Korean government's ultra-speed communication

... SNIP ...

And I hope to hear from you about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knowledge about the similar issues; On talk radio, I heard that New Jersey drivers licenses are going to have a lot of encoded data. I did some searching on the internet but could not find anything. If you find information on this please let me or ABF know about it.

Right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news article, I will try to contact various NGO's in South Korea to inform them of the importance of the issue. And I will try to organize an anti-electronic ID Card movement in the cyberspace, if that is necessary.

FABULOUS IDEA!!!!

I am very happy to meet you in the cyberspace, who really concerns the privacy issues in the computerized age.

I'm happy to meet you too.

Michael C. Castle

1001 G Street NW Suite 700 East Washington, DC 20001

September 12, 1995

AGAINST A NATIONAL ID.

STATEMENT OF DEIRDRE MULLIGAN

Staff Counsel

In 1982 William Safire declared, "Congress is about to take this generation's longest step toward totalitarianism." The "step" Safire so passionately urged the nation to resist is

exactly the same one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speak out against -- the creation of a 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 and the identity card necessary to support its operation.

Over the years proposals for a 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 and card have reared their ugly head as a "quick fix" to what some perceive as a pressing national problem of keeping track of people. Each proposal has been defeated on the grounds that it posed a grave threat to privacy, was likely to be used in a discriminatory manner by employers and law enforcement, and was impractical, unreliable and costly. In essence, the creation of a national ID system and card could not be justified when balanced against the cost to civil liberties, and the impact on efficient and effective government administration.

Many American's react with visceral distrust to national ID proposals. For most Americans the prospect of the government requiring each of us to carry an identity card -- with our fingerprint, retina scan or voice pattern on it if Senator Dianne Feinstein (D-CA) has her way -- or register our finger print with a federal agency, conjures up images of "Big Brother." Many Americans share my fear that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worker registry and worker identity card is a giant step toward increased government control over and involvement in their daily lives. Down the line this national identity card and system will be used for unanticipated, possibly repressive, purposes.

History reveals that a large-scale information system implemented for one narrow purpose inevitably takes on a life of its own. In our computer driven era where information is connected to a single identifier, such as the SSN, and entered into massive databases it is possible to instantly exchange, compare, verify and link information in separate databases. These storehouses of information, accessible to federal agencies, state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interests, present a very real potential for abuse and erosion of our freedom and privacy.

As the late Senator Sam Ervin stated at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cy Act:

There must be limits upon what the government can know about each of its citizens. **Each time we give up a bit of information about ourselves to the government, we give up some of our freedom. For the more the government or any institution knows about us, the more power it has over us. When the government knows all of our secrets, we stand naked before official power, stripped of our privacy.** We lose our rights and privileges. The Bill of Rights then becomes just so many words.

Creating a national ID system containing information on every American is a Big Brother, Big Government response that will create more problems than it solves. In the final analysis the hard-won freedom and privacy of 270 million Americans should not be the price of immigration reform.

From: Jose Luis Borbinha <jose.borbinha@inesc.pt>

To: "'sjokim@icg.stwing.upenn.edu'" <sjokim@icg.resnet.upenn.edu>

Subject: South Korea: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Date: Wed, 31 Jul 1996 13:22:21 +-200

MIME-Version: 1.0

Status:

Hi Joohan,

I read your message concerning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in South Korea, forwarded in the Red Rock Eater News Service (RRE) Email list.

It is a really frighten issue, and I've nothing new to comment it... I'm from Portugal, and I hope our situation could help your arguments.

In Portugal we have different cards for different purposes. The most important are (I'm writing from memory, so sorry for any imprecision - please ask me if you want more details):

ID card - every citizen must have an ID card with name, a national ID number, fingerprints, signature, born date and born place (just the region, not the address) and actual address. This cards are yellow, and they prove that you are a national citizen. Foreign residents must have also this card, but in blue color. It is not mandatory to use the card. Last year the (former) government sent out a law making it mandatory, but the President, following the public reaction, sent it back to the parliament and it was forgotten. If a citizen is asked by the authorities in a public place and has no ID card, the testify of another two documented citizens is enough.

Driving license - the usual... it has in common with the ID card only the name and address (it is usual when people change residence to change it on the ID card but forget the driving license, due to the complex bureaucracy - it has been my case in last 5 years...).

Tax payer card - name, tax payer number and an area code.

Social Security - There are different cards, depending of the situation (Sate employee, retired, ...). This card is also used for wealth services. Basically everyone has the same rights in the hospitals or other social services, except in what they'll receive when retired (sorry, I don't know how to call this in English...retirement pension?). The difference comes due to the different organizations that take care of this services (public, private or semi-private,...) Last year a former government tried to launch a national wealth care card, that should register only medical data, but it was refused again by proposal of the President following again a negative public reaction (concerned basically with privacy).

The constitution forbids any State Department to automatically compare data in this different cards. Specially, it is forbidden to have, in one card, information not relevant only for its purpose (such as, for example, the tax payer number and the national ID number).

Last year we had elections for both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The Government changed from the Right (one party with majority in the parliament) to the Left (no majority for any party, but the Socialist Party was the most voted, so it forms the government and has to make agreements in the parliament). The president was a socialist and another socialist woman. The President has the power to reject a law, except if it comes from the parliament with 2/3 of approval or if it is approved twice (after a presidential rejection).

Well, I hope this could help you.

Best Regards and good luck,
Jose Luis Borbinha

I would like to alarm you that another Big-Brother is coming with its most ambitious dream in South Korea: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which will be issued to every citizen as a mandatory within a year or so.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project is a part of South Korean government's ultra-speed communication network building project. Managed by the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the US \$413 million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Computer Institute. Once the project is completed in 1997, every Koreans of 17 years or older will be issued a single integrated circuit (IC) card with a photo which will include as many as 7 kinds (41 items) of personal digitized information: current universal ID card (currently every adult Korean has a photo ID issued by the Government), driver's license, medical insurance card, national pension card, proof of residence, and scanned fingerprints (!) among other things. (I don't know how many "democratic" governments are collecting fingerprints of their whole citizens.)

DACOM, a big telecommunication company in Korea, which won the bidding for the project, boasts: "As 8,000 characters worth of information can be stored on the single credit card-sized card, personal information needed for issuing official documents and certificates can be accessed promptly by public offices, institutions, companies, and banks or other organizations. The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has announced that the new cards will be distributed starting in January 1997. Full implementation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early 1998. While there are some nations in which drivers' licenses are used in place of ID cards, this project will be the first system in the world which combines multiple functions onto one card. Once distribution is completed, the card will greatly boost efficiency, saving the government US\$1.3 billion and enabling it to eventually reduce its work force by 5,000 employees." (Quoted from: <http://bora.dacom.co.kr/bora/dacom/news-clips.html>)

As you can see, they have no concerns abou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True, they are a company making money from that project, and probably we shouldn't expect any criticism against the Project. The problem is, however, that almost all of the South Korean news media are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the "efficiency" and the "convenience" that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might bring about.

I tried to find critical arguments against the project via a comprehensive news data base in Korea, but I could not find any. I also checked many web sit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ocio-progressive groups in Korea, but none of them have raised the issue yet. They do not seem to realize the suspending dangers of their own privacy and human rights. Despite obvious and serious danger i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there is just no social discourse concerning the issue. I have also checked

relevant laws (especially newly approved communication-related laws) through the database of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re seems to be no clear legal basis for the project. The project has been mentioned only in the "10 Plans for Efficient National Informatization,"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ut the City of Seoul already started to issue the Card as a "test" in March. The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said, as they were issuing the "test" version of the Card to 1,000 citizens, "we will prepar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mplying that they are doing the project "before" (and probably "above") the law.

At the round table, I would like to raise this issue: Against the Electronic Card Project:

Protect Privacy.

A few month ago, I noticed that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introduce a smart ID card which incorporates as many as 7 kinds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finger prints, into an IC card. This card will entail vast amount of databas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whole population, which facilitate the ^{class} Dataveillance. I raised the issue and sent out a note to privacy advocate scholars. (Below is what I sent out)

I received encouraging note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they are trying to organize a movement against the Korean Electronic ID card. The Director of Privacy International, Dr. Simon Davies, suggested to write a petition to the President Kim Young Sam. Other efforts seem to be being made. Dr. Simon Davies expressed his hope to contact Korean civil right advocates, lawyers, politicians, and journalists. (Refer to the attached file, which includes some of responses from many privacy advocate groups).

Please pass around this alarming note to everywhere.

Thank you very much,

Kim Joohoan

p.s. About the privacy issues, look at following web sites:

<http://www.epic.org/>

<http://www.anu.edu.au/people/Roger.Clarke/>

Currently, international privacy advocates are expressing deep concerns about the Electronic ID Card. Simon Davies, the Director of Privacy International, said:

>By way of introduction, I am the director General of Privacy International, which brings together privacy advocates from across the world. We have mounted campaigns in several countries against such proposals, and have occasionally succeeded in stopping ID cards, though I must say that the task is not an easy one. The justification of efficiency and crime control is very powerful.

> SNIP<

>I would like to suggest a possible approach. First, we need a core group of people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an opposition to the scheme. We succeeded in stopping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ID cards, but we had to create a diverse group of lawyers, journalists, academics etc. These provided the foundation of opposition. Are you able to suggest some people - say one lawyer one journalist and one political scientist - who could form the core group ? They will have to be living in Korea.

>

>Marc Rotenberg, our Secretary General, has suggested a some additional ideas on how we can help. These are :

>- Item on PI homepage

>- Petition signed by members of PI

>- Letter to President of South Korea signed by members of PI

>- Efforts to get news articles in press Report

>

>What do you think of this ?

>

> Reply to: RE>On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

>

>Joochan,

>

>Thanks you for your note. EPIC and Privacy International are discussing various steps that might be taken in response to the ID plan. One possibility is to send a public letter to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from many of the worlds leading privacy advocates and scholars, respectfully urging that the privacy implications of the ID plan be studied before the proposal goes forward.

>

>What do you think of this idea? Could it be effective? Do you have a mailing address for the President? Are there other steps we might take?

>

>Marc. Rotenberg.

>EPIC

>

>*****

>

>Dear Joochan:

>

> Roger Clarke forwarded me your email.

>

> In Quebec, we will soon go through a public debate on a similar project (cover story of Privacy Files May Issue): a multiservice card providing every citizens with an electronic signature device. The interesting thing for you is the very fact that there will be a public debate, in fact three: one before the Quebec national assembly, one following publication of a discussion paper on ID schemes by the Commission d'accès à l'information and one following pub of another paper by the Inforhighway Secretariat.

>

> Do you read French? There is some material I could send to you.

>

> Meanwhile, keep us informed. Quebec advocates are likely to publicize the Korean experiment as a negative example.

>

>> Best regards and our best wishes about this campaign.

>

>> * * * * *

> * PRIVACY FILES bureau/office <privacy.files@progesta.com> *

> * 1788 d'Argenson, Ste-Julie (Quebec) CANADA J3E 1E3 *

> * tel : +1 (514) 922 9151 fax: +1 (514) 922 9152 *

> * tel : (sans frais/toll free: Canada & US): (800) 922 9151 *

> * * * * *

>

>Hello --

>

>Roger Clarke sent me the enclosed message from you. May I forward it to a large global mailing list that I run? Information on the list is available at <http://communication.ucsd.edu/pagre/rre.html>

>if you are interested. (I certainly understand if you do not want your message circulated, but I thought I would ask.)

>

>You might find my paper in The Information Society (volume 10 number 2, July 1994) to be helpful; it suggests some ways to think about computerized tracking of human activities. You should also find out about the Mytec system (a company in Toronto, Ontario) for biometric encryption. Everything legitimate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nts to do with this identity card can also be done anonymously through biometric encryption.

>Thanks a lot

>

>Phil Agre

You'll be interested to know that the author, Joohoan Kim, was put onto me a fortnight ago by his PhD supervisor, me mate Oz Gandy, in Philadelphia. His message alarmed me, and I asked if I could send it to my personal list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30 privacy thinkers. One of those is me mate Phil Agre in Dan Diego, who runs rre. No, I don't know the person who posted it to cypherpunks, but isn't is a lovely little trace of how [bad] word spreads!

I also had a request-to-publish from the lady who runs Privacy Digest, after another of me mates on 'I've got a little list', Peter Neumann in Menlo Park, passed it onto her (sorry about the obscure allusion, but Peter's a Gilbert & Sullivan fan). So I expect it's appeared on privacy digest too, but I haven't checked.

And Graham Greenleaf will doubtless be publishing a brief excerpt in (Australasian) Privacy Law & Policy Reporter shortly.

Now all we have to do is fix the problem in South Korea: but at least "we" is rather bigger now ...

Roger Clarke <http://www.anu.edu.au/people/Roger.Clarke/>
Xamax Consultancy Pty Ltd, 78 Sidaway St, Chapman ACT 2611 AUSTRALIA
Tel: +61 6 288 6916 Fax: +61 6 288 1472

Visiting Fellow, Faculty of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Email: Roger.Clarke@anu.edu.au
Information Sciences Building Room 211 Tel: +61 6 249 3666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CT 0200 AUSTRALIA Fax: +61 6 249 0010

>Dear Kim, Joo Han,

>

>Further to my letter yesterday, please find attached the note I intend to publish in 'Privacy Law & Policy Reporter'. Is my reference to you OK? Is there anything I should

add?

>

>By the way, do you happen to have a copy of the Korean privacy act governing public agencies, or any details of it - or even its name!! I would love to receive and publish any details that you have.

>

>Are you interested in writing an article for the Reporter about privacy in Korea?

>

>Regards,

>Graham Greenleaf

>

>Bonjour.

>

> Do you have a fax number. There is some material I could fax you at once (in English).

>

> I also forwarded your message to a few privacy journalists friends that could be interested by what is happening in Korea. You might be contacted by at least one who is preparing a book on ID cards.

>

> I am not a specialist on ID cards. Roger Clarke is a good one. Simon Davies is certainly a very good one: he has produced an international study for the Ontario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a good overview, not detailed, but good).

>

> Best regards.

>

>

-- P.P.

> * PRIVACY FILES bureau/office <privacy.files@progesta.com> *

> * 1788 d'Argenson, Ste-Julie (Quebec) CANADA J3E 1E3 *

> * tel : +1 (514) 922 9151 fax: +1 (514) 922 9152 *

> * tel : (sans frais/toll free: Canada & US): (800) 922 9151 *

> *****

>

>Dear Joohan Kim,

>

>Saw your note on Phil Agre's RRE.

>

>There are a number of governments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twinned issues of access and privacy in developed national information policy. The Nordic nations are especially good in this regard.

>

>I recently wrote a paper that deals more with urban planning than privacy, but you will find some of the social issues relevant.

>

>At the end of the paper, there are a number of references to Web sites you will find helpful.

>

>I'm sending you the paper in three email files, but if you prefer to read

>it on the Web, you can look at

>

><<http://www.anu.edu.au/caul/cities.htm>>.

>

>The home page linked to that page is that of the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and their pages have several other links you may find useful.

>

>One of the key issues implicit in your letter requires consideration: the different cultural attitudes toward privacy that affect these kind of things in different cultures. Hofstede's work, for example, shows great differences in individualism versus group participation or high versus low power distance in business life. Anthropology shows great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public space or in acceptance of authority. I'd be surprised if this kind of difference was not also apparent in the way that different nations address the entire issue of priva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

>Best wishes for your study. Let me know if I can be of any further help.

>

>Yours,

>

>

>Ken Friedman, Ph.D.

>Associate Professor, Leadership and Strategic Design

>Norwegian School of Management
>Box 4676 Sofienberg
>N-0506 Oslo, Norway

>

>

>joohoan,

>

>i'm sure you've read this question a few hundred times by now, but i also need to ask. did you create an email message regarding the creation of an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b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n which you request arguments against this card? may i distribute your message? (and, if you did create it, i'll be happy to voice very strong opinions against this proposed mechanization of the human identity).

>

>thanks,

>patric

>

>

>In response to your post about the S. Korean National Identification card, I thought I would direct your attention to various pro-privacy groups here in the U.S. These include 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 based in Washington D.C.,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All of these groups have web sites loaded with information about privacy. Also, I will forward to you a privacy newsletter, co-sponsored by 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and other groups. It contains stories and histories related to privacy in electronic info.

>

>BTW, I am a Korean American law professor who teaches Internet Law!

>

>Maggie Chon

Joohoan,

>

>>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project is a part of South Korean government's ultra-speed communication

>

>

><SNIP>

>

> And I hope to hear from you about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knowledge about the similar issues:

>

>On talk radio, I heard that New Jersey drivers licenses are going have a lot of encoded data. I did some searching on the internet but could not find anything. If you find information on this please let me or ABF know about it.

>

>> >

>> >Right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news article, I will try to contact various NGO's in South Korea to inform them of the importance of the issue. And I will try to organize an anti-electronic ID Card movement in the cyberspace, if that is necessary.

>

>FABULOUS IDEA!!!!!!

>> >

>> >I am very happy to meet you in the cyberspace, who really concerns the privacy issues in the computerized age.

>

>I'm happy to meet you too.

>> >Michael C. Castle

1001 G Street NW Suite 700 East

Washington, DC 20001

September 12, 1995

AGAINST A NATIONAL I.D.

STATEMENT OF DEIRDRE MULLIGAN

Staff Counsel

In 1982 William Safire declared, "Congress is about to take this generation's longest step toward totalitarianism." The "step" Safire so passionately urged the nation to resist is exactly the same one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speak out against -- the creation of a 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 and the identity card necessary to support its operation.

Over the years proposals for a 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 and card have reared their ugly head as a "quick fix" to what some perceive as a pressing national problem of keeping track of people. Each proposal has been defeated on the grounds that it posed a grave threat to privacy, was likely to be used in a discriminatory manner by employers and law enforcement, and was impractical, unreliable and costly. In essence, the creation of a national ID system and card could not be justified when balanced against the cost to civil liberties, and the impact on efficient and effective government administration.

Many Americans react with visceral distrust to national ID proposals. For most Americans the prospect of the government requiring each of us to carry an identity card -- with our finger print, retina scan or voice pattern on it if Senator Dianne Feinstein (D-CA) has her way -- or register our finger print with a federal agency, conjures up images of "Big Brother." Many Americans share my fear that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worker registry and worker identity card is a giant step toward increased government control over and involvement in their daily lives. Down the line this national identity card and system will be used for unanticipated, possibly repressive, purposes.

History reveals that a large-scale information system implemented for one narrow purpose inevitably takes on a life of its own. In our computer driven era where information is connected to a single identifier, such as the SSN, and entered into massive databases it is possible to instantly exchange, compare, verify and link information in separate databases. These storehouses of information, accessible to federal agencies, state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interests, present a very real potential for abuse and erosion of our freedom and privacy.

As the late Senator Sam Ervin stated at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cy Act:

There must be limits upon what the government can know about each of its citizens. Each time we give up a bit of information about ourselves to the government, we give up some of our freedom. For the more the government or any institution knows about us, the more power it has over us. When the government knows all of our secrets, we stand naked before official power, stripped of our privacy. We lose our rights and privileges. The Bill of Rights then becomes just so many words.

Creating a national ID system containing information on every American is a Big Brother, Big Government response that will create more problems than it solves. In the final analysis the hard-won freedom and privacy of 270 million Americans should

not be the price of immigration reform.

From: Jose Luis Borbinha <jose.borbinha@inesc.pt>
To: "sjokim@icg.stwing.upenn.edu" <sjokim@icg.resnet.upenn.edu>
Subject: South Korea: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Date: Wed, 31 Jul 1996 13:22:21 +-200
MIME-Version: 1.0
Status:

Hi Joohan,

I read your message concerning The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 in South Korea, forwarded in the Red Rock Eater News Service (RRE) Email list.

It is a really frighten issue, and I've nothing new to comment it... I'm from Portugal, and I hope our situation could help your arguments. In Portugal we have different cards for different purposes. The most important are (I'm writing from memory, so sorry for any imprecision - please ask me if you want more details):

ID card- every citizen must have an ID card with name, a national ID number, fingerprints, signature, born date and born place (just the region, not the address) and actual address. This cards are yellow, and they prove that you are a national citizen. Foreign residents must have also this card, but in blue color. It is not mandatory to use the card. Last year the (former) government sent out a law making it mandatory, but the President, following the public reaction, sent it back to the parliament and it was forgotten. If a citizen is asked by the authorities in a public place and has no ID card, the testify of another two documented citizens is enough.

Driving license - the usual... it has in common with the ID card only the name and address (it is usual when people change residence to change it on the ID card but forget the driving license, due to the complex bureaucracy - it has been my case in last 5 years...).

Tax payer card - name, tax payer number and an area code.

Social Security - There are different cards, depending of the situation (State employee, retired,

...). This card is also used for wealth services. Basically everyone has the same rights in the hospitals or other social services, except in what they'll receive when retired (sorry, I don't know how to call this in English...retirement pension?). The difference comes due to the different organizations that take care of this services (public, private or semi-private,...) Last year a former government tried launch a national wealth care card, that should registry only medical data, but it was refused again by proposal of the President following again a negative public reaction (concerned basically with privacy).

The constitution forbids any State Department to automatically compare data in this different cards. Specially, it is forbidden to have, in one card, information not relevant only for its purpose (such as, for example, the tax payer number and the national ID number).

Last year we had elections for both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The Government changed from the Right (one party with majority in the parliament) to the Left (no majority for any party, but the Socialist Party was the most voted, so it forms the government and has to make agreements in the parliament). The president was a socialist and another socialist won. The President has the power to reject a law, except if it comes from the parliament with 2/3 of approval or if it is approved twice (after a presidential rejection).

Well, I hope this could help you.

Best Regards and good luck,

Jose Luis Borbinha